

2016년 소방간부후보생 - 행정학

해설 : 이승철

01 목표의 대치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과두제의 철칙 ② 규칙·절차에 대한 집착 ③ 유형적 목표의 추구
④ 조직 내부분제의 중시 ⑤ 다른 목표로 교체

해설

⑤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불가능한 경우 실현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찾아 설정하는 것(다른 목표로 교체)은 목표의 승계(succession)이다.
•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왜곡·전환·전도·전치·도치) : 목표가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표가 되는 현상, 목표와 수단 간 우선순위가 바뀜. 종국적 가치를 수단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조직이 궁극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망각·왜곡하여 그것을 수단으로 격하시키거나, 수단을 목표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

■ 목표전환의 발생원인

- ㉠ 소수 간부의 권력욕
①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② D. Truman의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 : 힘이 강한 활동적인 소수의 이익집단으로 인하여 잠재집단이나 조용한 다수의 권익이 무시됨(예 노조간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을 배신하는 행위).
③ Merton & Gouldner의 동조과잉(over-conformity) - 규칙·절차에의 집착, 지나친 합법성 중시 : 규칙·법규·절차의 엄수 강요시 규칙·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어 Red-Tape(형식주의, 儀式主義, 樣式主義), 동조과잉 초래.
④ 목표의 지나친 무형성으로 인한 유형(하위) 목표의 중시 : 무형목표(상위목표)의 추상적 개괄적 성격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이 있고,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현실감 있고 명확하며 측정가능한 유형목표(하위목표)에 치중해 무형목표 경시 초래.
⑤ 목표의 과다측정(over-measurement)과 전치(과시)행정 : 조직이 대외적 홍보활동 확대와 대내적 통제나 감시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을 위해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양화(量化; 수치로 표현)를 증가시켜 행정의 계량화 경향(GNP, 수출액, 투자액, 교통사고 사망률 등)이 심화되면 계량화할 수 없는 목표(QOL, 개성·자아실현, 행복감 등)는 망각되기 쉬움. 목표의 과다측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목표 같은 본질적 목표는 경시됨.
⑥ 조직 내부 문제의 중시, 전문화에 따른 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Selznick)
⑦ 조직의 경직화와 변화에의 저항(Blau)

답 ⑤

02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수준이 다른 직급계열은?

2016 소방간부

- ① 직급 ② 직군 ③ 직류 ④ 직위 ⑤ 직렬

해설

⑤ 직무 종류 유사, 책임도·곤란도 상이, '직급'의 무리 ⇨ 직렬

■ 직위분류제의 구조

기 준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류	직렬	직군	직급	등급
직무의 종류·성질	유사			유사	상이
직무의 책임도·곤란도	상이			유사	

등급
↓
•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까지 구성은 직위 < 직급 < 직렬 < 직군
↓
직류

직위(position)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위분류의 최소단위(예 00실장, 00국장, 00과장)
직류(sub-series)	같은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예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재경직류 등)
직렬(series of classes)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예 행정직렬, 세무직렬)
직군(occupational group)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위분류의 가장 큰 단위(예 행정직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직급(class)	(동일 직렬 내에서)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예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등). 동일한 직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됨.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
등급(grade)	(직렬과 직군을 초월하여) 직무의 종류·성질은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계급제의 계급에 해당. • 직무등급 : 우리나라는 등급은 없고 실정법상 계급으로 표현했으나,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직무등급' 개념이 도입되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외무공무원은 직무등급이 적용되며 더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승격'이라 한다.

답 ⑤

03 다음 중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방송통신위원회 ② 공정거래위원회 ③ 금융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대통령 소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헌법상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국무총리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4차(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답 ①

04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이용은 행정과목 간의 재원 이전으로 국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제도를 말한다.
- ③ 이월은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겨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④ 명시이월 경비는 원칙적으로 재이월할 수 없다.
-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해설

- ① (×)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재원 이전**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
- ② (×)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산내용이나 예산규모 등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해당 예산의 귀속만 변경하는 것이다. 제시된 지문들은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변동'이란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 동법 제47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③ (○), ④ (×) 명시이월 경비는 다시 다음 연도로 재이월(사고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된 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다.
• 동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明示移越)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② 국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다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事故移越)	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② 국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는 다시 다음 연도로 재이월할 수 없음.

구 분	사전예측	예산형식에 포함	국회의 사전승인	재이월	사용 사례	공통점
명시이월	사전예측 가능	○	필요	가능(사고이월)	적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	×	불필요(사전의결원칙의 예외)	금지	많음	

- ⑤ (○) 동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정답 여부 : 출제기관은 ①을 정답으로 처리했지만 ②④도 틀린 내용이다.

답 ①②④

05 인과적 학습에 의한 반복적인 의사결정과 의사결정모형의 수정이 환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결정모형은?

2016 소방간부

- ① 회사모형
- ② 쓰레기통모형
- ③ 엘리슨모형
- ④ 최적모형
- ⑤ 사이버네틱스모형

해설

이 문제는 행정학 저술의 이단(異端), '새행정학 2.0(이중수 외 공저)'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출제되었다.

① **일반적인 학자들의 설명**: 합리모형은 인과적 학습,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도구적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고 본다.

구분	분석적 패러다임(합리모형)	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적응모형)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인지전능) - 합리적 선택이라는 의사결정태도에 그 기초	제한된 합리성(인지능력의 한계) - 인간의 정보처리과정과 적응행태에 더 관심
조직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조직 ⇒ 유기체이므로 개인의 의사결정 = 조직의 의사결정	상이한 목적을 지닌 개인의 연합체로서의 조직 ⇒ 유기체가 아니므로 개인의 의사결정 ≠ 조직의 의사결정
문제해결	알고리즘(연역적 방식, 계량적 분석) / '최선의 답' 추구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경험적 판단) / '그럴 듯한 답' 추구
학습	인과적 학습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대안분석	동시적 분석	순차적 분석
의사결정	목표의 극대화, 최적 수단 선택 - 가치극대화 관점	비목적적, 점진적 적응 - 적응 관점
불확실성 대응	불확실성 예측을 통한 감소(정보에 대한 민감성)	불확실성의 통제 추구
모형	합리모형, Allison의 Model I	조직모형, 회사[연합]모형, Allison의 Model II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의하면 조직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분석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어·환류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적응을 해 나간다고 본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탐색을 거치지 않고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만을 미리 정해진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미리 개발해 둔 해결책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 합리모형은 대안의 예측결과에 따라 대안을 선택하는 인과적 학습을 하지만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사전에 설정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도구적 학습을 한다.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은 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 없이 일단 어떤 대안을 채택해 보고 나서 그 결과 좋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시행착오적 전략**이다.

• **인과적 학습(casual learning)**: 합리모형에서 대안의 분석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이 변하는 것.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대안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대안과 결과 간 인과관계를 밝힌 다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채택. 대안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대안의 결과예측을 바꾸고 모형도 수정하게 함.

④ **'새행정학 2.0(이중수 외 공저)' 내용**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온도조절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설정되면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원리를 정책결정 현상에 응용한 것이다. 이 모형은 온도조절기가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작동과 정지를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것처럼 특정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류 메커니즘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 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며, **인과적 학습에 의한 반복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모형의 수정이 환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일정 수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응적 의사결정과 인과적 학습에 의한 의사결정의 수정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⑤ **결론**

'새행정학 2.0'에서 표현된 '인과적 학습에 의한 반복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모형의 수정이 환류되는 것'은 결국 도구적 학습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문제가 출제될 경우 일단, 인과적 학습은 합리모형, 도구적 학습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으로 보되 '인과적 학습에 의한 **반복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모형의 수정이 환류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출제될 경우에는 '새행정학 2.0'의 내용에 따른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징으로 보고 풀어야 한다.

참고로 2008년 국회직8급 문제를 덧붙인다.

답 ⑤

[참고기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습관적 의사결정 ② 적응적 의사결정 ③ 인과적 학습 강조 ④ 불확실성의 통제 ⑤ 집단적 의사결정

답 ③

06 정책결정자들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정책방향 제시에 머문 채 정책집행자들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은?

2016 소방간부

- ① 지시적 위임형 ② 재량적 실험형 ③ 협상형 ④ 고전적 기술자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결정하고 집행자가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형이다.

■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구 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자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 목표	추상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협상 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결정자	집행자
	구체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 수단	행정적 수단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기술적 수단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집행자의 재량		재량권 적음 ← → 재량권 많음				
정책평가기준		효과성	효과성, 능률성	지지자의 만족도	수혜자에 대한 대응성	체제유지도

답 ②

07 집단의사결정기법 중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은?

2016 소방간부

- ① 텔파이 기법 ② 브레인 스토밍 ③ 지명반론자 기법 ④ 명목집단기법 ⑤ 점증적 의사결정

해설

■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각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 구상)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제한된 토론을 거친 후 투표로 의사결정(표결)을 하는 방법(델파이 기법과 달리 토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함).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들은 명목적으로만 집단이 됨.
- ㉡ 토론의 방만한 진행을 예방하고 좋은 의견이 고르게 개진될 수 있지만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 ㉢ 전자적 회의 방법은 명목집단기업에 컴퓨터 기술을 접목시킨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해 입력하고 컴퓨터를 통해 표결하는 방식을 활용.

답 ④

08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산매각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징수교부금수입 ⑤ 사업수입

해설

- ①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수입

■ 세외수입의 구성

실질상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일반회계수입
	사업수입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주택, 공영개발, 기타 특별회계사업	특별회계수입
명목상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	재산매각대금,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기타 수입(불용품 매각수입,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일반회계수입
	사업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 수입	특별회계수입

답 ①

09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조직구성원이 참여적 과정을 통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 ② 집권화된 조직에 적용하기가 쉽다.
- ③ 운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목표 달성도의 측정이 어렵다.
- ④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 ⑤ 예측 가능한 결과지향적인 계량적 목표를 추구한다.

해설

- ② (×) 권위주의적·집권적·위계적 조직(수직적 계층제)에서는 업무분담이나 참여관리가 곤란하므로 MBO를 적용하기 어렵다.

■ MBO의 특징 구별

MBO 특징인 것	MBO 특징이 아닌 것
유형적·양적·단기적·결과지향적·가시적인 목표 중시. 목표전환 우려 산출(output) 중시	추상적·질적·가치적·장기적·비가시적 목표 중시. 목표전환 방지 결과(outcome) 중시
안정된 상황에 적합	환경의 불확실성·유동성 상황에 적합. 상황변화에 대한 신속적 대응
분권화·참여·자율적·민주적 관리. Y이론. 통합모형. 자아실현인관	집권적·권위적·통제적 관리. X이론. 교환모형. 경제인·사회인
결과(result)·목표 중시, 목표달성에 초점, 환류 중시	과정(process)·수단 중시, 행태변화에 초점, 환류 경시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목표모형, 개방체제관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체제자원모형, 폐쇄체제관
추진방향 - 상향적	추진방향 - 하향적
내부 계선관료 중심, 일반관리기법 활용	외부 전문가 중심, 행태과학적 지식(전문지식) 활용
대내적 민주성	대외적 민주성, 고객중심행정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효과성·능률성(효율성·생산성)	궁극적 목적은 민주성
갈등의 건설적 해결. 협력적 노력을 통한 조직 전체의 효율성	갈등·대립 유발.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답 ②

10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부처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③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국가재정법 관련규정

-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답 ③

11 행정의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중복적 조직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창조성과 개혁성이 일어난다.
- ② 랜도(Landow)는 권력분립, 연방제, 삼심제도 등에 가외성 현상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 ③ 능률성을 향상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 ④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조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증진한다.
- ⑤ 조직의 갈등이나 대립 등의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

해설

- ③ (×) 가외성은 추가적인 장치나 기능을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능률성을 저해한다.
- ⑤ (○) 기능 중복에 의한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권한의 상충·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답 ③

12 신공공관리론(NPM)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행정관료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 ② 정부와 관료제를 지나치게 폄하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 ③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④ 행장의 과정(Process)보다 결과(Outcomes)를 강조한다.
- ⑤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해설

- ① (×) 시장을 이상화하고 정부관료제를 폄하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또한 인원 감축과 유연한 노동시장(개방형·계약직 임용)을 지향하므로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화되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의 충성심·책임성이 약화되며, 직업공무원제를 저해한다.

답 ①

13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만족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정책결정자는 최적의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 ②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중모형의 장점을 혼용하는 모형으로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이 이 모형에서 제시한 순서와 접근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점중모형은 정책결정을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쇄신과 혁신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에 적당하다.
- ④ 최적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과 아울러 정책결정자의 직관, 판단,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 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해설

- ③ (×) 점중주의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현존 정책에 약간의 변화만을 가감한 정책대안을 고려하므로 반혁신적 보수주의, 현상유지성향을 지니므로 쇄신이나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경제·사회발전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된 다원주의 사회에 더 적합하다.

답 ③

17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집단이나 개인의 행태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행정 연구에 있어서 가치와 사실을 구별한다.
- ③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④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분석수준은 거시적 분석의 성격을 띤다.
- ⑤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해설

④ (×) 행태주의는 환경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폐쇄체계관이며, 인간 행태 중심의 미시적 분석으로서 문제의 사회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답 ④

18 다음 중 훈련효과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속하는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사전시험의 영향
- ② 집단특성의 영향
- ③ 실험상황의 영향
- ④ 역사적 요소
- ⑤ 복수훈련의 교란

해설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을 적용하면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은 ④이다. ①②③⑤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①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실험 전 측정의 반응효과 ; 사전조사[pretest]문제)이다. 사전측정 후 훈련을 받은 경우 사전측정과 훈련의 상호작용으로 훈련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 이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사전측정 없이 훈련만 받은 집단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② 대상집단의 특성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훈련 외의 특정 사건에 의한 것인 경우 성숙요인이나 역사요인으로서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그러나 집단특성의 영향은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 '표본의 대표성 미흡'과 관련된다. 훈련효과 평가 대상 집단이 전체적으로 근면 성실한 자로 구성되어 훈련에 집중함으로써 훈련효과가 높게 측정될 수 있지만 동일한 훈련프로그램을 다른 집단에게 실시할 경우 동일한 훈련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③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와 관련된다. 훈련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상황의 인위성으로 인해 대상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경우(예 대상자가 실험대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된 결과는 다른 상황에서 측정된 결과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에 해당된다. A 훈련의 효과 평가시 피훈련자가 B 훈련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쳐 A훈련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A훈련만 받은 자에 대한 평가와 비교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 관련요인	선발(선정)요인 상실(탈락)요인, 회귀인공요인(실험직전반응효과)	외재적 요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성숙(성장)요인, 사건(역사)요인	내재적 요인
	관찰 및 측정 관련요인	측정수단(측정도구)요인, 측정(검사·조사·시험)요인	
	비교집단 간의 상호작용	오염·확산(누수·누출), 모방, 부자연스런 반응)	
	복합요인 - 단일 요인들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외재적 요인 + 내재적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①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② 표본의 대표성 미흡, ③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크리밍 효과·위광 효과(creaming effect), ⑤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실험 전 측정의 반응효과 ; 사전조사문제), ⑥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답 ④

19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예산 통일의 원칙과 예산 단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 행정기관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 행정의 능률화,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④ 예산구조가 복잡하여 재정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 ⑤ 특별회계의 수와 규모는 점차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 ①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단일성의 예외이며,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므로 통일성의 예외이다.
- ② (○)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수입·지출(수지)을 명확화 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며 행정기관의 재정성 확대, 적극성·창의성 도모를 통해 행정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다.
- ③ (×) 특별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의 규모가 과다하면 예산구조가 복잡하여 재정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 ⑤ (○) 정부의 예산사업이 다양해지면서 특별회계 규모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답 ③

20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모든 국민, 법인과 단체,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②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 할 수 없다.

해설

- 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에서 국내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인정)
- ② (○) **동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각호 생략).
- ③ (○) **동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④ (○), 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가능.
- 동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답 ⑤

21 정책의 유형과 그 예들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추출정책 : 조세, 병역, 물자 수요, 노력 동원
- ② 구성정책 : 서울올림픽경기, 남대문 복원
- ③ 재분배정책 : 수출 특혜 금융,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의 대출
- ④ 상징정책 : 누진세, 영세민 취로사업, 세액 공제나 감면
- ⑤ 분배정책 :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활동 규제

해설

②는 상징정책, ③은 분배정책, ④는 재분배정책, ⑤는 규제정책의 사례이다.

정답유형별 사례 비교

배분정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도로, 학교, 다리, 항만, 철도, 국립공원), 보조금·지원금 지급(벤처기업창업지원금, 수출보조금),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주택자금 대출, 수출특혜 금융, 택지분양, 국유지 불하, 국공립교육서비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지원, 무의촌지역보건진료, 국책연구개발사업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과대광고금지, 환경규제, 식품위생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설정, 식품의약품 사전허가제
	경쟁적 규제	방송·항공기·이동통신·고속버스노선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인·허가 사업, 면허제도(의사면허, 낚시면허)
	사회적 규제	소비자보호(불량식품단속), 환경규제(오염물질배출규제), 사회적 차별규제(장애인고용촉진법), 근로자의 복지
	독과점 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담합에 대한 규제
	경제적 규제	가격규제(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서비스규제(품질기준), 진입·퇴거규제,
	자율규제	변호사회·약사회·의사회·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자율규제, 신문협회의 경품제공 규제
추출정책	징병(병역), 조세, 노동력 동원, 토지수용, 성금(= 준조세), 공무원 채용	
상징정책	국기, 애국가, 아리랑 노래, 지방자치단체의 새·꽃·나무·마스코트 지정, 국경일, 훈장, 각종 축제·행사(올림픽, 아시안게임, 체육대회), 각종 상징조형물(동상, 기념탑, 기념비), 기념행사·기념식·기념일, 반공이념, 국군의 날 가두행진, 중앙청(조선총독부건물) 철거와 경복궁 복원	
재분배정책	누진세, 임대주택 보급, 부(負)의 소득세(소득 보조), 세액 공제·감면, 공공근로사업, 사회보장지출(생활보조금), 통합국민건강보험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성정책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변경, 공무원보수·연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답 ①

22 균형성과표(BSC)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의 균형
 ② 리더의 관점과 구성원의 관점의 균형
 ③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
 ④ 과정과 결과의 균형
 ⑤ 내부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의 균형

해설

BSC는 재무적 관점뿐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의 기업의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전략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조직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관리나 전략적 성과평가시스템이다.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으로 전략체계를 구성하고,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등에 의하여 장기·단기, 원인(과정)·결과, 외부·내부 등을 균형 있게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모형이다.



- ① 단기적 관점(재무관점)과 장기적 관점(학습·성장 관점)의 균형 : 전통적 재무회계 모형은 과거의 정보에 의존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했지만 BSC에서는 장단기 목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단기적 성과에 추가하여 조직의 본질가치와 성장 동력과 같은 장기적 성과지표도 중시.
- ③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 : 무형자산의 가치가 재무성과와 어떻게 연계되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내지 전략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성과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고객, 내부업무처리, 학습·성장관점)의 균형을 꾀함.
- ④ 결과와 원인[과정]의 균형(선행지표와 후행지표 간 균형) : 결과를 측정하는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와 이러한 결과를 낳는 성과동인[成果動因, performance drivers]인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 간 적절한 균형 중시. 과정과 결과 간 인과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균형을 추구하므로 최종성과가 좋지 않을 때 원인이 투입과 과정의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유리.
- ⑤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의 균형 : 조직 구성원과 조직구조 등에 대한 내부적 관점(학습·성장 관점, 내부업무처리 관점)과 조직 환경에 속하는 고객과 주주의 외부적 시각(재무관점, 고객관점)을 함께 고려.

답 ②

23 정부의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소방간부

- ① 공유재의 비극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그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결국 고갈되고 마는 현상을 말한다.
- ② 정부의 결정에 의해 형성된 독점 또는 배타적 이익을 경제학적 용어로 지대(rent)라고 한다.
- ③ 파킨슨은 미국 국방성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하여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기적 행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 ④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 X-비효율성이다.
- ⑤ 주인-대리인 모형은 본래 민간부문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해설

- ① (○) 공유재의 비극은 인간의 이기적 성향, 공유재의 비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 ② (○) 지대(rent)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는 데 따라서 정상이윤(기회비용) 이상으로 얻게 되는 초과이윤으로 정부가 인허가제 등 진입규제를 가할 경우 제도적 독점에서 나타난다.
- ③ (×) 파킨슨법칙은 영국의 학자 파킨슨(C. Parkinson)이 1957년에 주창한 법칙으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매년 일정 비율로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영국 해군에서 근무하던 파킨슨은 1914년부터 1928년 의 기간 즉, 1차 세계대전 후 영국해군의 함정은 67%, 장병 수는 31.5% 감소했으나, 해군행정인력은 오히려 78% 나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조직의 크기나 업무량이 줄어들어 반하여 행정인력은 매년 5.75% 증가한 셈이었다. 이러한 인력증가의 원인을 부하배중의 법칙과 업무배중의 법칙으로 설명하였다.
- ④ (○) X-비효율성은 경영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인의 감소로, 조직구성원의 활동이 나태해지거나 방만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기업의 경영진이나 노동자들이 경쟁 압력과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자원배분의 효율화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 상승 및 생산성 저하와 관련된 개념으로, X-비효율성은 사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공공부문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행정학 문제에서는 X-비효율성을 정부실패원인으로만 출제되고 있으나 민간 기업이 독점적 생산업체인 경우에도 나타난다.
- ⑤ (○)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것으로 1976년 켄센과 매클링(M. Jensen & W. Meckling)이 제시했다. 대리인 관계에 있어 보통 경제 행위를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 이를 위임받는 사람은 대리인이라 한다. 즉 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인, 주주에게 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자는 대리인이 된다. 전문경영자 체제에서 대리인 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인 주주와 맺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주주는 회사의 장기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전문경영인은 자기 임기 동안만 회사가 잘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은 짧은 임기 동안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보다는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우량 자회사를 매각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

답 ③

24 근무성적평정의 집중화와 관대화 경향을 막기 위한 평가방법은?

2016 소방간부

- ① 서열법 ② 가감점수법 ③ 산출기록법 ④ 중요사건기록법 ⑤ 강제배분법

해설

• 강제배분법[분포제한법, 강제할당법, 정규분포법] (Forced Distribution) : 성적 분포의 과도한 집중화·관대화·엄격화 오차의 방지를 위해 성적분포비율이 정규분포화 되도록 확실적으로 분포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방법.

답 ⑤

25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공식성, 비공식성, 내부, 외부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내부·비공식적 통제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2016 소방간부

-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시민에 의한 통제 ㉢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감사원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

-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해설

외부·공식 : ㉠㉡ / 외부·비공식 : ㉣㉤ / 내부·공식 : ㉢㉥ / 내부·비공식 : ㉦㉧

답 ②